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0
----------	-----

발의연월일 : 2024. 6. 14.

발 의 자 : 강대식·구자근·권영세
강승규·조지연·김장겸
임이자·김예지·이종배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는 소년소녀병이 집중 투입되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됨.

이에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소년소녀병 중에서 6·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나. 소년소녀병등과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 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년소녀병등 또는 그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19조).
- 아. 소년소녀병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는 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0조).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소녀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당시 기준)의 사람을 말한다.
2. “이중징집자”란 소년소녀병 중에서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징집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소년소녀병 또는 이중징집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 ①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이하 “소년소녀병등”이라 한다)와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년소녀병등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소년소녀병등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상금) ①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부당한 징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추가 보상금) 이중징집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이중징집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소년소녀병등이 사망한 당시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소년소녀병등과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

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지급신청 이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लय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의 면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소년소녀병등,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비병역징집 및 이중징집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소년소녀병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5조에 따른 추가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

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소년소녀병등의 인정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